



보건복지 분야 데이터의 폭넓은 활용을 기대하며

강신욱 | 통계청장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경제적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기존의 산업과 서비스에 접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면서 산업구조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신기술을 활용한 제조 공정의 혁신, 플랫폼 기반 서비스 등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확산, 데이터를 토대로 취향과 관심사에 부합하는 제품 추천 등 산업 전반과 일상에 빠르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인구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합계출산율도 2018년 기준 0.9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의 합계출산율을 가진 국가라는 달갑지 않은 수식을 얻게 되었다. 싱가포르나 마카오 같은 도시국

가를 제외하고는 최초로 1명 미만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국가라고 하니 그로 인한 사회 변화는 우리 생각 이상으로 빠를지도 모른다. 고령화도 마찬가지다. 이미 예견되었으나, 그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 2017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이 82.7세로 80세를 넘긴 지 오래이며,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인구 피라미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고령층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인구 변화에 대한 예측도 달라져 인구 정점 시기가 2031년에서 2028년으로 3년이나 앞당겨졌다.

이처럼 급변하는 경제적·사회적 변화 속에서 국가의 정책은 더욱 정교해질 것을 요구받고 있다. 직관이나 감이 아닌 증거에 기반한 정책만이 정책 목표와 대상을 정확히 타기팅(Targeting)

할 수 있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그 중심에 데이터가 있다. 그렇다면 국가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까? 우선 국가 차원에서의 기본 데이터는 통계이다. 정부의 정책 수립, 집행, 평가 과정에서 통계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필수적인 자료이다. 증거 기반 정책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통해 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 정책의 성과와 효율성도 통계에 근거해 평가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의 통계는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2016년 12월 기준 보건·사회·복지 부문 국가승인통계는 217종으로 전체 국가승인통계의 21.7%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9년 6월 기준 보건·사회·복지 부문 국가승인통계는 309종으로 늘었고, 그 비율도 26.7%로 증가했다. 이는 곧 정책의 대상과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고스란히 예산의 증액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20년에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올해 대비 12.9%가 증액된 181조 7000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전체 예산 요구액(498조 7000억 원) 증가율이 6.2%인 점을 감안하면, 두 배가 넘는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예산의 편성과 증액이 가능한 것도 관련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복지 분야 통계가 예전부터 국가 통계의 중심이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제 분야 통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는 더뎠다.

경제통계의 경우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라는 체계적인 프레임워크 하에서 개발되고 발전해 온 반면, 보건복지 분야 통계는 포괄성과 체계성, 배타성을 갖춘 프레임워크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개발·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통계 수요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양적 성장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었고, 이와 관련된 통계의 역할이 확대되어 왔다. 특히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양극화, 불평등, 사회적 약자 등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관련 정책들이 개발·집행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행정 자료가 축적되었다. 이러한 행정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되었으며 보건복지 분야 통계가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을 형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보건복지 분야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여기에는 개인의 질병 정보, 진료 내역 등 극도로 민감한 정보들이 많아 이를 활용하는 데 법적·제도적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해당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를 민간 영역에서 담당하고 있어 이를 국가 통계화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건강보험 DB와 같은 중요한 자료가 가치를 발휘할 수 있

도록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에 주어진 과제라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데이터이며, 이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정책이 나아갈 수 없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 정책은 거시적 정책 수단을 통해 미시적 정책 대상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정교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의 다양한 상황과 요구를 측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이 측정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통계와 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어려운 숙제이지만 정책 당국과 통계 및 데이터 전문가들이 서로 모여 행정 자료 활용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해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자료를 국가통계화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